

촛불 항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 OUT

지자율 7퍼센트짜리 대통령을 그대로 놔둬야 하나

6월 20일~22일 **48시간 비상국민행동**
6월 21일(토) **2차 범국민행동의 날**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



촛불은 어디로

- 이명박 퇴진 논쟁

3면



‘고대녀’ 김지윤 인터뷰

6~7면

이명박 OUT 투쟁

- 추가협상이라는 추가 사기극
- 방송 · 인터넷에 재갈 물리는 2MB
- 민주당의 기회주의
- 수직 추락한 이명박의 747
- 꼬리자르기식 인적쇄신

2, 4면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

7면



화물연대 파업에 승리를!

12면

고유가와 세계 노동자 투쟁

9면

볼리비아 민중 항쟁에서 배우다

5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파시즘이 재집권할까

8면

<맞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맞불> 온라인 기사

남원시의 물 민영화 계획 철회
남원시에서 공무원노조, 전교조, 시민단
체들이 함께 투쟁해 물 민영화를 저지하
는 값진 승리를 거뒀다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ww.counterfire.or.kr

6월 10일 1백만 명 시위는 촛불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 줬다. 애초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온라인 참가자까지 포함해 1백만 명을 기대했지만, 촛불집회가 시작된 이래 늘 그랬듯이 촛불의 힘은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21년 만에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서자 권력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다. 어떻게 해서든 촛불을 중단시켜야 하고 촛불이 강화될 수 있는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게 저들의 생각이다. 6월 10일 밤에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오른 사설은 “항의 표시는 충분히 했다 … 이제 정부를

지켜보자”는 것이었다. 촛불을 끄라는 얘기다.

조중동은 촛불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희망 섞인 보도를 하는 한편, 의제 확장과 “정권 퇴진 운동 불사”라는 국민대책회의 방침,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에 비난의 핏대를 올린다. 의제 확장은 “운동권 본색”을 드러내는 “시위 메뉴 급조”이고, 순진한 촛불 참가자들은 대책회의가 “6개월 전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자신들이 참여해서 치러진 선거까지 무효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는 걸 알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란단다.

그러나 지난 50일의 진실은,

국민대책회의가 ‘순진한’ 촛불 참가자들의 뒤를 허겁지겁 간신히 쫓았다는 것이다. 그 반대가 아니었다.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구호는 5월 말 이후 촛불집회에서 대세로 자리잡았다. 국민건강을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가 취임 3개월 동안 정신 차리기 어려우리만큼 서민 말살 정책을 쏟아낸 정부에 대한 반발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다.

의제 확장도 촛불집회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0교시 때문에 밥 못 먹고 학교 가서 급식으로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에 걸렸는데 건강보험이 민영

화돼 치료도 못 받고 죽으면 나라를 대운하에 뿌려 주요.” 촛불집회가 시작될 무렵 고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했던 이 농담은 이미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4개의 의제를 담고 있었다.

의제 확장은 소수 음모가들의 의도적 “급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시위가 이토록 오래 지속되고 계속 확대돼 온 비결이다.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 최진의 말대로, “모든 불만이 일시에 터져나온 것으로, 쇠고기 문제만으로는 현재의 시위 사태를 이해할 수 없다.”

» 3면으로 이어짐

“인용해도 될까요?”

“사실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몸무게가 3킬로그램 빠졌습니다.”

— 이명박

“쇠고기 산업에서 … 이윤은 가족과 내장을 파는 것에서 나온다. … 운 좋게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팔기 위한 수출 시장이 있다.”

— 미국 아이오와 농장 연합의 무역분석가 조엘 시버링하우스

“그들[88만 원 세대]의 촛불이 언제 핏물이 되고, 이어 쟁들과 화염병으로 변할지 알 수 없을 지경”

—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의 걱정

“재벌 기업들과 환율 인상으로 혜택을 많이 보는 대기업들은 (이익을) 나눠 줘야 한다.”

— 화물연대 파업에 밀린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안전기준을 갖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 쇠고기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

— 미국 축산업계를 대변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 오바마

“역사를 보라. 빨리 집에 가면 안 된다. 국회를 믿어? 차라리 천일기도를 하자.”

— 촛불을 끄고 국회를 지켜보자는 주장에 대해, 한홍구 교수

우익의 치졸한 MBC ‘PD수첩’ 공격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아래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발표하자 국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거 봐라’며 MBC ‘PD수첩’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PD수첩’은 담당 의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인간광우병 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 봐야 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미국 농무부 레이먼드 차관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실도 후속 보도했다.

오히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야말로,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 마리도 없다”는 등 ‘아님 말고’식 거짓말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저질 찌라시라는 말을 듣는가 보다.

게다가 부시 정부가 강력히 개입했을 가능성이 큰 CDC의 발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981년에 처음으로 에이즈가 알려졌다를 때 CDC는 마치 동성애가 이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발표한 바 있다.

설사 CDC의 발표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니다. 미국은 광우병의 원인으로 입증된 동물성 사료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장호중

2MB로부터 KBS를 방어하라



6월 13일 촛불시위대 2만 명이 KBS를 방어하기 위해 마포대교를 건너고 있다

과 방송 통제 반대를 외치는 축제의 장이 됐다.

‘방송통제위원장’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6월 16일에 ‘조종심 심판, 공영방송 지키기’를 주제로 촛불집회를 열었다. 6월 16일에는 3백여 명이 ‘방송통제위원장’ 최시중 사퇴를 요구하며 최시중이 OECD 장관회의 개회사를 하기로 돼

있는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시위를 하고 테헤란로를 거쳐 강남역까지 행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해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KBS본부 노조가 정연주 퇴진을 내걸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 ‘KBS스페셜’의 이강택 PD는 “구한말 일본이 조선반도를 삼키려 할 때 고종 퇴위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다”며 KBS 노조를 비판했다.

강철구

‘추가 협상’이라는 추가 사기극

강동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꿈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부가 미국 도축장 점검 내용을 감춰 온 것이 폭로됐다.

미국 도축장을 점검하고 돌아온 농림부 시찰단은 지난 6월 5일 미국 도축장의 “위생 관리와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 제거 등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내부 보고서는 미국 도축장에는 부정확한 연령 감별법인 치아감별법을 위한 인원조차 부족하고 많은 도축장에서 SRM인 소장 끝부분의 제거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광우병 위험이 큰 30개월 이상 분쇄육이 학교 급식과 햄버거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율 규제

게다가 대형 유통업체인 이랜드 홈에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자율규제’ 속에 언제든지 쇠고기의 원산지·연령·부위를 속이고 팔 위험이 있

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합의안의 문구 일부라도 수정하는 형태의 재협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는 ‘민간 자율규

제’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조차 미국 정부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은 심증팔구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할 것 같다.

설사 추가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재협상은 국익을 해친다?

이명박은 “쇠고기 문제를 너무 주장하다가 자동차 등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가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파업을 추진하자, <조선일보>는 “FTA가 좌절되거나 자동차 조항이 한국에 불리하게 고쳐져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공략에 실패하면 가장 먼저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원들부터 조업 단축과 감원의 구령팅이로 떨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한미FTA 자동차부문 재협상은 쇠고기 재협상과 상관없이 미국 민주당이 요구해 온 것이다.

게다가 한미FTA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날지는 확실치 않다.

이미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이를 더 늘릴 계획이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자동차들이 한국에 더 많이 수입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미 수출이 늘어나도 자동으로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자동차 수출은 크게 늘었지만 모토화 속에서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수입을 지켜 준 것은 바로 투쟁과 파업이었다.

한미FTA의 선결 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개방하는 것이었지만 수입의 구체적 조건은 아니었다. 따라서 수입 조건에 대한 재협상이 한미FTA에 타격을 주는 것을 넘어 비준 자체를 좌초시

KBS PD협회와 기자협회도 KBS 노조의 정연주 퇴진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KBS노조 부산시지부, 경남도지부, 충북도지부, 대전·청주·창원시지부도 KBS본부 노조에 협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편, 언론노조는 최근 갈등을 빚던 KBS 노조가 조합비를 납부하기로 하자 징계 계획을 취소하고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방송의 공공성 사수를 위해 언론노조와 KBS 노조의 협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정연주 사장 퇴진에 대해 KBS 노조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쉽다. 언론노조는 민주노조의 일부답게 KBS 노조의 잘못된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해야 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언론노조에서 찬성율이 78.6퍼센트나 나왔다. 평범한 KBS 종사자들은 2MB의 공영방송 장악 저지를 위해, 촛불 운동의 쇄퇴 따위를 운운하는 9시 뉴스 보도와 달리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옹호하고 더한층 동참해야 한다.

강철구

해도 길어야 1년 정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미루는 것이다.

더구나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SRM, 검역 주권, 도축장 승인권, 전수검사 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는 아예 없는 문제인 것처럼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오직 기존 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하는 것뿐이다.

킬 것이라는 이명박과 보수 언론들의 호들갑은 과장이다.

무엇보다 노동자 등 서민이 한미FTA를 통해 득볼 것이 없다. 한미FTA의 핵심은 ‘구조조정’과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의 시장화와 요금 인상 등이다. 이것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더불어 자동차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손해고 부자들만 득을 보는 일이다.

따라서 이명박과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 ‘국익’은 부자·재벌의 이익일 뿐 노동자 등 서민의 이익은 아니다.

노동자 등 서민의 이익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촛불시위와 노동자 파업으로 부자·재벌들이 양보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 1면에서 이어짐

제도적 수렴? 지금 거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6월 10일 1백만 명 시위 이후 그 판돈의 무게를 느끼는 것은 권력자들만이 아니다. 다음은 무엇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촛불 운동 안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거리에서 1백만 명이나 결집한 이 어마어마한 운동이 무엇을 내걸든 그것을 이를 잠재력이 있음을 다들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얘기다.

논란의 가장 오른쪽에는 이제 ‘거리의 정치’를 그만 하고 제도권 정치에 맡기자는 주장이 있다. 최장집, 박상훈 같은 학자들과, 촛불집회 참가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던 MBC, KBS, <경향신문> 등이 이런 김빠는 얘기를 하고 있다. MBC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등원해야 한다는 논평까지 냈다.

그러나 지금 제도권 정치는 거리의 요구를 수렴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 18대 총선 직후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국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가. 민주당은 다른 의제는 둘째치고 쇠고기 문제만 봐도 믿을 수 없는 존재다. 그 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의회에서 ‘어린이집 미국산 쇠고기 급식 사용 금지 조례’조차 부결시켰다.

판돈

현재 국회에 일말의 기대를 가진 사람들만이 제도적 수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태인 교수는 “비용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촛불집회를 무한히 이어갈 수 없다”며 “우리가 이번에 촛불을 통해 요구했던 것들을 어떻게 제도로 만들지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거리의 운동을 계속 유지 확대시키고 결국 요구를 쟁취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은 서서히 자리 털고 일어나거나 거리가 아닌 부유층 대표자 토론 장소로 관심을 이동(또는 분산)할 때가 아니다.

왜 우리가 1백만 명이나 모이고도 요구 성취 전에 스스로 거리에서 물러나야 하는가? 우리가 흩어지는 순간 이명박 정부는 탄압의 공세를 조이고 ‘너희는 1백만 명이 모여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국민 세뇌로 임기를 사수하려 할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이 6월 29일 승리를 향해 가기 전에도 그만 거리에서 물러나는 주장이 있었다. 6월 19일 계엄설이 나돌자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내 김영삼계와 김대중계 집행위원들이 전두환 군사독재와의 정치협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때 그런 주장을 물리치고 거리의 운동이 지속되지 않았다면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1백만 촛불과 이들을 지지하는 수천만 명의 힘을 모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왜 퇴진 운동이어야 하는가?

촛불 운동 내의 가장 뜨거운 논란은 이명박 정권 퇴진 요구 제출 여부다. 국민대책회의는 1백만 명 시위 직후 “정부가 20일까지 재협상 방침을 밝히지 않으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20일까지 재협상 방침을 밝히지 않을 게 뻔하다. 김종훈 보파리를 풀어놓으며 또다시 국민 기만을 시도할 것이다. 이 점이 명확한데도, 안타깝게도 국민대책회의는 정부에게 제시한 시한 종료 이후 정권 퇴진 운동을 선언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대책회의 소속 단체 가운데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노동전선, 한국작가회의(송경동 시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시

민·사회단체들 상당수가 정권 퇴진 운동을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로 한 국민대토론회의 일정마저 19일부터 27일까지 늘려 잡았다. 이명박은 일주일의 말미를 보너스로 더 얻은 셈이다.

맥 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들 사이의 싸움에서도 언제까지 두고 보자고 했으면 그 뒤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가 우리를 우습게 보며 자신감을 얻어 역습의 기회를 노릴 것이고, 우리 편은 기가 꺾일 것이다.

정권 퇴진 운동을 반대한 단체들은 퇴진 운동이 “선부르다”, “성급하다”고 말했다. 거리에 1백만 명이 쏟아져 나왔는데 무엇이 성급하단 말인가. 거리에 1백만

명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 그들을 지지하는 수천만 명이 있다는 얘기다. 아직 거리 시위가 수만 명 수준이었을 때조차 <조선일보>는 “더 섬뜩한 것은 이 같은 거리의 시위에 가세하지 않은 국민들조차 정권을 바라보는 눈길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촛불집회 참가층이 다양한데 퇴진을 걸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제 제도권 정치에 맡기자’는 MBC와 <경향신문> 등의 논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투쟁이 전진하느냐 마느냐의 고비를 넘을 때 전진하자는 쪽과 말자는 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멈추자는 주장과 논쟁해야 하고, 분명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 이 투쟁에 큰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떨어져나가고 사기 저하할 위험이 있다.

퇴진 운동의 현실성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교육, 대운하, 방송, 의료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물가 인상 등 이명박 정책이 모두 문제라고 말한다. 1퍼센트 [사회 최상층]를 위한 정책들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명박은 여전히 “기업 프렌들리”를 다짐하고 있다. 그는 16일 아셈 재무장관회의에서 재벌들을 위한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그리고 FTA 확대를 재확인했다. 인터넷 괴담도 늘어놓았다.

이명박이 이런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를 퇴진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우리는 더 나은 정부를 가질 자격이 충분히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운 시일에 선거가 없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이명박이 물러나면 법에 따라 대선을 다시 치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우리는 이 열려진 공간을 이용해 아래로부터 운동을 강화하면 된다.

박상훈 씨는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에서 운동을 통해 민주적

선거의 결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경우 이에 대한 반작용이 매우 클 수 있다”며 두려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던 대통령이 거리의 저항에 의해 쫓겨난 실제 사례들이 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에서는 3년 동안 대통령 2명이 쫓겨났고 물 사유화 반대 운동을 이끈 MAS(사회주의운동당)의 지도자 에보 모랄레스가 새 대통령이 됐다. 2003년 대통령 로사다가 물러나고 후임으로 카를로스 메사가 등장한 뒤에도 운동은 멈추지 않았다. 2005년 볼리비아 민중은 석유 다국적기업들의 이윤에 50퍼센트의 세금을 매기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4월에 국회가 탄화수소법[천연가스 재국유화법]을 통과시켰지만 메사는 새 법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투쟁을 주도한 세력들은 요구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했다. 3월에 시위대는 50퍼센트의 세금을 요구했을 뿐 메사의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두 달 뒤에는

보상 없는 전면 국유화와 메사 퇴진을 요구했고, 결국 이를 실현시켰다.

지금 며칠의 말미를 더 얻은 이명박은 김종훈 보파리와 쇠신안 등을 내놓는 한편 카운터펀치를 날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퇴진 운동을 둘러싼 우리 운동의 약점을 파고들 궁리를 하면서 말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명박 사기극에 맞서 촛불의 기세를 유지 확대하는 것이다. 20일까지 재협상을 밝히지 않을 이명박에 맞서 주말(6월 20~22일) 비상행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공격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총파업 자신감도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민대책회의나 그 소속 단체들이 화물연대 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을 옹호하는 주장과 활동을 하면 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도 거리의 기세가 국민대책회의의 방향을 이끌었다. 퇴진 운동을 향한 길도 이렇게 닦이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퇴진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주장과 운동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가장 늦게 와서 가장 먼저 촛불을 끄는 민주당

김인식

“지금은 열흘 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만큼 난국을 타개하고 등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6월 15일에 민주당 대표 손학규가 한 말이다.

민주당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지난 달 29일야 ‘장외’ 투쟁에 나섰다. 최초의 촛불이 타오른 지 27일 만이다.

그런데 6·10 촛불 항쟁에 1백만 명이 넘게 참가하자 겁을 집어먹고는 가장 먼저 촛불 운동에서 빠져나가 ‘제도권’으로 돌아가려 안달이다.

지금 민주당은 ‘원내에 들어가고 싶으니 명분을 달라’고 한나라당에 애걸하고 있다. 민주당의 등원 명분은 가족전염병 예방법(가족법)이다.

피죄죄

그러나 가족법은 촛불 운동이 요구하는 재협상과 거리가 멀다. 또, 광우병국 민대책회의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의 가족법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을 허용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찬성하고 있는 한미 FTA가 비준·발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 제도에 의해 가족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나마 한나라당이 가족법 개정을 매정하게 거부하는 통에 민주당의 꼴이 피죄죄하기 이를 데 없다.

6월 16일에는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재협상과 국민건강권 확보’가 자기기만 일 뿐임이 드러났다. 민주당 소속 서울 강북구 의원들이 ‘공공기관내 미국산쇠고기사용금지에 관한 결의안’을 앞장서서 부결시킨 것이다.

따라서 운동은 민주당과는 독립적으로 지속·확대돼야 한다. 어차피 민주당은 운동의 덤이었을 뿐이다.



어디서 뭐하다 잠깐 와서 금방 사라진 손학규

민주노동당은 일관되게 거리의 정치를 유지해야

민주노동당은 일찌감치 촛불 운동에 합류했고 일찍부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한 유일한 원내 정당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행보는 다소 모순적이다.

민주노동당은 재협상 전에는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 등원을 위한 요식행위”인 ‘쇠고기 재협상 및 가족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했다.

또, 6월 13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당 지도부는 야3당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이미 등원을 결정했고, 민주당은 등

원하고 싶어 쯤이 쑤서 있는 판국에 민주당이 야3당 공조를 붙잡고 있을 까닭이 없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거리의 정치와 원내 정치를 병행해야 한다는 강박 — 거리에 서는 민주노동당이 딱히 할 일이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한 — 에 사로잡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노동당이 의회를 기웃거릴 때가 아니다. 거리에 남아 자본가 야당들의 불철저함과 기회주의를 폭로하고 비판함으로써 운동의 지속·확대에 이바지할 때다.

머리를 두고 꼬리만 자르는 ‘인적 쇄신’

최미진

3개월 만에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이 수습책으로 내놓은 ‘인적 쇄신’은 그동안의 국민우롱 시리즈의 연속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면개각도 아니고, 그나마도 질질 끌며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64.9퍼센트가 인적쇄신안을 “기대하지 않는다.”(6월 16일 한길리서치 조사)

쇄신 논란을 틈타 정두언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열받은 이명박의 ‘버럭’에 금세 깨갱하며 물러섰다. 이명박은 ‘쇄신’은커녕, 강부자 내각을 만든 ‘형님 공천’의 당사자조차 바꾸지 않고 버티겠다는 것이다. 아리랑TV, 스카이라이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이어 YTN 사장까지도 MB맨들을 낙하산처럼 줄줄이 내려 보낸 것만 봐도 그가 진정한 쇄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문서답

그러면서 이명박이 만지작거린 카드는 ‘보수대연합’이었다. 국민의 압도 다수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이명박의 친재벌 반서민 정책을 모두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정반대로 친재벌 반서민 옹호자들끼리 대연합하자는 황당한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총리설이 물건너가고, 심대평 총리안에 이회창이 반대하고 나선 것처럼 그조차 잘 될지는 의문이다. 향후에 이명박 퇴진 요구가 발전하면 지배세력 전체가 느끼는 위기감 때문에 이들이 야합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떤 경우든 이들은 권력을 나눠 먹고 촛불을 끄는 데만 관심 있을 것이다.

강부자·고소영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명박은 ‘비영남, 비고대, 10억 이하’ 기준에 맞는 인사를 찾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의 정책을 계승하는 이상 이 기준은 아무 소용 없다.

총리 후보 심대평은 독재정권 내내 청와대에서 일했고 박정희를 ‘시대에 맞는 대통령’이라고 말한 독재 찬양론자고, 다른 후보 강현욱도 전북도지사 시절 새만금사업을 밀어붙이며 환경운동가들에게 물대포를 쏜 명박스러운 자다. 이것만봐도 누가 총리가 되든 쇄신과는 거리가 멀 것임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은 1백만이나 거리로 나왔는데도 온갖 미친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화물연대 파업 탄압을 진두지휘할 정도로 재벌과 부자를 위한 정책을 버릴 생각이 없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명박을 그대로 두는 이상, 어떤 쇄신도 소용없다.

날지도 못하고 추락한 이명박의 ‘747’

강동훈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파산했다. 7퍼센트 성장은커녕 4퍼센트대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올 4월까지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벌써 68억 달러에 달했다. 단 몇 개월 앞도 예상하지 못하고 헛된 공약만 내놓았던 것이다.

세계경제는 점차 더 심한 위기에 빠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트남은 경제 침체 일보직전이고, 라틴아메리카·아시아·동유럽 나라들은 엄청난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 외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중 한 나라라도 경제가 붕괴한다면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위기는 이제 모기지·자동차 대출과 신용카드 위기로까지 번져가고 있다. 베어스턴스에 이어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도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기업의 이윤 보호를 위해서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 상황에서도 고환율 정책(원화 약세)을 써, 수출 재벌의 이윤을 보호해 줬다. 그 때문에 원유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83.6퍼센트나 올랐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서민에게 전가됐다. 밀가루·라면 등 생필품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고, 하반기에 공공 서비스 요금과 맥주·음료·우유 등의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다.

뒤늦게 이명박 정부는 물가를 억제하

겠다고 하지만, 부자·재벌의 이윤에는 손도 대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의 한계 때문에 효과가 작을 것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유류세 같은 간접세 인하를 극구 반대했고, 정유사 폭리의 제한을 거부했다. 현대차·삼성전자·엘지전자 등 재벌들의 물류 자회사들이 운송료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도 정부는 손쓰지 못했다. 대신 적자를 보며 일해야 하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서민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기업의 이윤이 줄더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일자리·복지 수준을 지키도록 요구하며 싸워야만 노동자·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이 볼리비아 항쟁에서 배워야 할 교훈

김용욱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볼리비아는 신 자유주의 모델이 될 법한 나라였다. 민영화, 복지 예산 삭감, 노동 유연화 등 이명박이 도입하려는 것과 같은 정책들을 1985년에 살인적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한꺼번에 도입했다.

그 결과는 재앙이었다. 민영화 과정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토지는 대지주의 수중으로 집중됐고 농민은 자기 토지를 잃고 떠돌기 시작했다. 대중의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옛 독재 정부 출신 대통령은 저항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러나 이런 ‘충격 요법’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고 대중의 분노만 나날이 쌓여갔다. 민중이 아만적 정책에 맞서 싸울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것은 새 천년에 들어서였다. 이를 처음 보여 준 것이 2000년 코차밤바의 ‘물 전쟁’이었다.

볼리비아 정부가 코차밤바 주(州)의 물 공급을 벡텔 등 다국적기업에 넘긴 결과, 최저임금이 약 6만 원인 나라에서 가구당 월평균 수도요금인 1만 5천 원에 달하게 됐다.

분노한 지역 주민들, 다양한 시민단체와 조직 노동자들이 힘을 모았다. 그들은 ‘물과 삶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을 결성했고, 공개 회의에서 투쟁 과정과 투쟁 방식을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 사항을 함께 이행했다. 급진화한 주민 대중은 수도요금 인상 반대를 넘어 물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했다. 그들은 주요 도로를 점거했고,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민영화 결정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다.

코차밤바 투쟁은 2003년과 2005년에 반복될 투쟁 패턴 — 거리 시위와 조직 노동자 투쟁의 결합, 요구의 급진화,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의 등장 — 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민중의회

2003년 우파 정부를 몰아내는 투쟁이 일어났다. 이 운동의 직접적 원인은 볼리비아 천연가스를 미국과 멕시코에 수출한다는 정부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 석유 다국적기업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사실상 천연자원 추가 민영화의 전초전이나 다름없었다. 대중은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는 돈이 없어 가스를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가스를 수출한다. 가스를 수출한 돈은 다국적기업이 가져간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스 수출인가?” 대중은 거리로 나섰다.

당시 대통령 산체스 드 로사다는 이 정당한 의문에 잔인한 폭력 진압으로 답했다. 2003년 9월 19일 경찰이 시위대에 발포해 3명이 사망했다.

이제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코차밤바 주(州)에서 ‘물 전쟁’에서 일어났던 일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수도 라파스에서는 ‘민중의회’가 열렸다.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의원 수천 명이

2003년 우익 대통령의 사임 소식에 환호하는 광산 노동자－조직 노동자의 참가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

모여 공동으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결정된 사항을 라디오를 통해 알리고 자기 지역에 돌아가 투쟁을 조직했다.

시민들과 농민단체는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도 파업에 들어가 물류를 마비시켰다. 볼리비아 전락 산업 중 하나인 광업에서는 전투적인 볼리비아노총(COB)이 총파업을 선언했다. 모든 광물 채굴이 즉각 중단됐다.

천연가스 수출 반대가 투쟁의 초점이었지만, 사람들은 투쟁 속에서 급진화했고 다양한 요구를 내놓았다. 민중의회는 투쟁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볼리비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공통 요구를 작성했다.

물·가스·석유 등 천연자원 국유화,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반대, 민주적 권리 확충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 등이 공

통 요구가 됐다. 사람들은 이것을 ‘10월 의제’라고 불렀고, 그 뒤로 볼리비아 민중 항쟁이 성취해야 할 목표가 됐다.

이것을 쟁취하려면 먼저 1980년대 시장주의 ‘충격 요법’을 도입한 장본인인 로사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했다. 대통령 사퇴는 민중의회의 공식 목표가 됐고, ‘10월 의제’와 함께 운동의 힘을 결집시키는 초점이 됐다.

반격

민중은 로사다를 몰아냈다. 물론 초기에는 부통령 카를로스 메사가 살아남았고 헌법에 따라 그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메사가 갑자기 대통령과 거리를 뒀고,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간계급 지식인과 일부 운동 지도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민중의회는 부패·착취·억압이 없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대안 사회의 모습을 힘껏 보여줬지만, 민중은 한 번 더 구제제 인물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카를로스 메사는 민영화 중단, 재국유화, 복지 확대를 약속했고, 농민에게는 토지 분배를 약속했다. 메사는 “만약 내가 여러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를 쫓아내도 좋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거짓말과 배신뿐이었다. 메사는 약속을 모두 어겼다. 국내외 기업인과 대지주들의 이익에 봉사해 온 인물이 이제 와서 개과천선할 리 없었다. 오히려 천연자원과 부를 독점해 온 산타크루스의 우파들과 손을 잡고 인간다운 삶을 원하는 압도 다수 볼리비아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만약 이 순간에 사람들이 다시 뭉쳐서 반격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공식 정치의 영역을 뛰어넘어 시위와 파업으로 정부를 꺼꾸러뜨리지 않았다면, 옛 독재자가 폭압적으로 시장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1980년대 비극이 되풀이됐을 것이다.

2005년 5~6월 투쟁은 볼리비아 민중 항쟁의 정점이었다. 민중의회가 훨씬 더 큰 규모로 등장했다. 6월 8일, 항쟁의 심장부인 엘알토에서 최초로 전국적 민중의회가 열렸다. 당시 민중의회는 사실상 대안 정부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전국 방방곡곡 투쟁이 없는 곳이 없었고, 기존 국가 기구들은 무기력해졌다. 평범한 사병과 말단 경찰 들은 자기 부모 형제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다. 결국 메사는 물러나야 했다.

아쉽게도 민중의회는 새로운 사회의 대안 정부로 발전하지 못했다. 대신에 민중은 진보 대통령 후보인 에보 모랄레스에게 기회를 줬다.

모랄레스 당선 이후 볼리비아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모랄레스 정부는 ‘10월 의제’를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천연자원을 재국유화했고, 거기서 나온 자금을 복지 확충에 썼다. 무토지 농민을 위한 토지 개혁을 시작했고, 모든 농민에게 노령연금 지급을 약속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가정부들에게도 연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런 조처들을 도입하는 것을 보면, 돈이 없어 복지 확충을 못한다고 투덜거리는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뻔뻔한 거짓말쟁이들인지 깨닫게 된다.

그러나 볼리비아에는 여전히 이런 변화에 반대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다. 고위 국가 관료·기업주·대지주가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지금 모랄레스 정부를 좌초시키고, ‘10월 의제’가 상징하는 진보적 정책들을 무력화하고,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한다.

돌이켜보면, 2003년 10월과 2005년 6월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인 민중의회가 구성되고 잠깐 동안 노동자·서민이 사실상 사회의 주인이 됐을 때, 즉 그들의 힘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런 국가관료·기업주·대지주의 권력 기반을 해체했더라면 ‘10월 의제’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회는 오늘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민영화·대운하·언론 통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일 것이다. 시장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사회일 것이다. 시장주의 반대 운동의 또 다른 이름이 ‘대안세계화운동’이고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가 가장 인기 있는 구호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볼리비아 민중 항쟁은 그 ‘다른 세계’를 위한 투쟁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 준 가장 최근 사례다.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 우리 모두 볼리비아 투쟁에서 배워야 한다.

대안 사회의 씨앗을 보여 준 민중의회

일명 “고대녀” 김지윤 인터뷰

“20대가 보수화했다고요?”



토론에서 한승수와 김중훈을 짝꿍매게 해 국민 스타가 된 고려대 사회학과 4학년 김지윤 학생을 만났다. 삼성과 고려대 당국에 맞서다 출교를 당했지만 천막농성을 하며 7백 일 동안 굴하지 않고 싸워 지난 3월에 복교를 쟁취한 그녀가 이제는 촛불 운동의 목소리 구실을 하고 있다.

이제 전국적 정치 스타가 되셨는데 본인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갑작스러웠죠. 친구들한테 문자를 받고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크다고 생각진 않지만, 이 운동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어 뿌듯해요.

한승수, 김중훈 등 정부 당국자들과 토론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한승수 총리가 얘기했던 것은 간단해요. 하나, 정부를 믿어달라. 둘, 이제 국민 뜻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라. 셋, 자유무역 해야 하나까 필요하다. 넷, 그러니까 재협상 안 된다. 녹음기처럼 이 말만 하더라고요. 전혀 들을 자체가 아니에요.

제가 검역 체계의 허술함과 이전의 재협상 사례를 들어 반박했는데, “경제가 중요하다”, “자동차 많이 팔아야 한다”, “국가 신뢰도 문제가 있다” 등 똑같은 소리만 해요. 국민들의 뜻을 듣기는커녕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거죠.

‘촛불’ 초기에만 해도 20대가 탈정치화했다는 얘기가 무성했는데요?

10대를 부각하다 보니 20대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요. ‘20대는 이명박 찍었고 보수화됐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홍보전 해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와서 서명하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대학생들이 참 많아요. 다만, 학생회 차원으로 많이 오지는 못해서 멀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도 [촛불시위에] 가고

싶은데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2년 만에 학교 다녀보니까 이해가 돼요. 리포트도 써야 하고, 시험 준비, 조별 발표까지. 그런데다가 졸업요건은 강화돼서 토익도 봐야 하고, 한자·컴퓨터 자격증에 …, 근데 등록금이 비싸니까 아르바이트도 가야 하는 거예요. ‘하루가 정말 스물여섯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자게 …’ 이러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경쟁에 지든 우리들의 생활은 파파해요.

그런데 6월 10일에는 ‘그래, 내가 평소에는 못 갔지만 오늘은 꼭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고려대는 동맹휴업이 80퍼센트 찬성으로 가결되고, 학내 집회도 2백~3백 명이 나왔는데 행진하면서 대열이 붙어나서 광화문 도착할 때는 1천여 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언론은 [촛불 시위의] 주축이 10대에서 20대로 바뀌었다고도 하더라고요.

[내]식당에서 밥 먹다 보면 모두가 동맹휴업 얘기 하고 있고, [고려대 LG포스코관에 있는] ‘이명박 라운지’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래요. 거리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대학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학생들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줄 세우기 식 미친 교육을 강요당하는 청소년들은 대학 가서도 다르지 않아요. 대학 자율화·국립대법인화하면서 등록금도 올리고, 재정은 경영 성과가 좋은 학교에 편중 지원해요. 이런 게 강화될수록, 경쟁 논리가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영어몰입교육을 강요 당해요. 이런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운 정치활동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건이기도 하죠.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부터 등록금 인상 반대하는 학생들 잡아갔잖아요.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그런 거 없었다고 발뺌했어요. 청소년들이 광우병 반대를 외치면서 미친 교육 반대로 외쳐 국민적 공감을 샀듯이, 대학생들도 광우병 문제와 교육 시장화, 대학 경쟁 강화, 대학자율화 반대를 결합시켜야 해요.

이건희 철학박사학위 수여 반대 시위와 병설보건대 통폐합 문제 등으로 출교 처분을 받았다가 7백 일 동안 싸워서 복학하셨죠? 소위 ‘교수 감금’ 등의 오해와 출교 사태의 진실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자칭 ‘대한민국 CEO’라 잼아요. 근데 당시 고려대 어윤대 총장도 자기더러 ‘고려대 CEO’라고 했어요. 이명박이 대한민국을 기업처럼 운영하면서 소수 부자들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처럼, 바로 어윤대도 돈벌이 되는 학문만 밀어주고, 기초학문들은 무시했고, 대학을 기업에 팔아넘기려 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삼성 이견희 회장에게 철

학박사학위를 수여하는 것이었죠. 게다가 삼성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불법 세습하는 나쁜 기업이었어요. 이런 기업의 회장에게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시위를 했었는데, 이 시위가 ‘고려대 기업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상징적 저항으로 자리 잡으면서, 학교로서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경영에 제동이 걸렸어요. 이 때문에 저희가 학교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던 거죠.

병설보건대 문제로 마찬가지로요. 고려대는 돈벌이를 위해 의대·간호대·보건대 등을 기반으로 ‘메디컬 플렉스’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병설보건대를 통합하기로 했는데, 보건대 학생들은 전문대생이라며 차별 받았고 무시당했어요. 학교 당국은 이에 저항한 학생들을 교수 ‘감금’으로 왜곡하면서 낙인찍고 학생들을 쫓아냈던 거죠.

일부는 저를 교수를 ‘감금’한 ‘패륜아’인데, 실제로는 숨기고 평범한 학생인 것처럼 위장한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출교생이었던 것이 한 치도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대학 기업화를 당해봤기 때문에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가 경쟁 강화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체험하게 됐고, 이 때문에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이 얼마나 안 좋은지 더 분명해졌어요. 법원에서도 ‘교수 감금’ 아니라고 인정했는데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저를 비난하는 분들은 분명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거죠.

간혹 지윤 씨가 함께해 회원·민주노동당 당원이라며 문제 삼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으로 오고 단체로 오지 말라”는 사람



(위) ‘삼성 X파일 전면 공개와 이견희·홍석현 구속 촉구 집회’에 참가한 김지윤 씨 (아래) 촛불시위에서 공연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

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함께 회원이건 민주노동당 당원이건 한국 사회에 사는 한 시민으로서 광우병 문제에 맞닥뜨리는 건 누구나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려는 것인데 그게 자발성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다함께 활동을 하면서 광우병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토론회 때] 발언했던 내용들도 저 개인이 똑독해서가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들, 주간 <맛불>에 나온 기사, 광우병대책회의 자료 등의 도움을 얻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운동이 점점 성장하고 규모가 늘면서 이런 비방과 왜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의 단결이 중요하고 공동의 적에 맞서서 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요즘은 집회장에서 다함께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시민들이 나서서 방어해 줘요.

앞으로 이 촛불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지윤 씨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광우병 문제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식 마인드의 큰 흐름에서 나온 여러 문제 중 하나예요. 우리가 든 촛불은 민영화 프렌들리, 전쟁 프렌들리, 미친 교육 프렌들리, “비즈니스 프렌들리”이 모두에 반대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10년 만의 정권 탈환이라고 의기양양하던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우리의 촛불 앞에서 벌벌 떠는 게 보여요. 여기서 켜기를 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흐지부지되면 저들이 우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반격을 하겠죠. 물론 식물 대통령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켜기를 막으려면 노동자들이 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중동이 언제는 우리더러 불법이라더니 이제는 시민의 자발성이 중요하지 노동자가 웬말이냐고 해요. 노동자도 시민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조선일보>가 배후설 제기하면서 민주노총의 참여를 막으려고 했던 것도 파업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광우병 하역 거부를 선언하고 유가 인상에 맞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처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서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싸우고, 이명박 정부의 미친 정책들을 막기 위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아버린다면 켜기를 박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곧 시험이 끝나는데, 방학 때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도심에서 벌어지는 행동에 참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6월 10일에 연단에서 “노동자들에게 비정규직화와 민영화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자”고 호소했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노동자들이 큰 함성과 박수를 보내 주셨어요. 바로 그 노동자들이 싸울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노총이 빨리 총파업에 돌입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정리 한수영

민주노총 파업은 정당하다

정종남

드디어 민주노총 지도부가 총파업 일정을 발표했다. 7월 2일 하루 파업, 3일부터 5일까지 집중 상경 투쟁, 그 후에도 부문별 파업과 총력 투쟁을 이어가 7월을 집중 투쟁 기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제부터 조직된 노동자들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석형 위원장의 약속대로 금속·공공·보건의료 등 다른 부문의 파업이 잇달아야 한다.

촛불시위가 내뿜은 투쟁 에너지가 조직 노동자 부문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자, 정부와 조중동을 비롯한 우파 언론은 이간질에 혈안이 됐다.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항을 틀어막고 시가 행진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은 물론, 서울 도심을 행진한 2만여 텀프연대 파업 대열에도 박수를 보냈다. 파업 농성장에는 네티즌과 주민들이 사다놓은 생수와 수박이 넘쳐나고 있다.

조중동은 지금 ‘현대차 노조 찬반투표는 부결된 것’이라고 혈투는 데서 거의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만 보더라도 투표자의 절반이 넘는 2만 1천여 명이 찬성했고, 더욱이 총연맹이 조직한 전체 투표에서는 전체 개표 결과가 구속력을 갖는다. 조중동 주장대로라면 유권자의 30퍼센트 정도밖에 득표하지 못한 이명박이 대통령인 것 자체가 문제다.

물론 민주노총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조직했다면 좋았겠지만 이번 결과는 짧은 준비 기간에 비춰 결코 낮은 찬성률이 아니다.

권력자들은 또 쇠고기와 민영화 등은 노조 현안이 아니어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요금도 오르고, 광우병 쇠고기를 온 가족이 먹어야 하는 상황은 다른 무엇보다 다급한 노동자들의 ‘현안’이다.

노동부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정치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서민 경제를 망치는 정책에 맞서 투쟁에 나서는 것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책임 있는’ 자세다.

전면공세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각계각파 시도에 취할 수 있는 “야구경기”(이석형 위원장)식 투쟁보다는 전면적인 공세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철도노조가 더 확실하게 대대운송을 막고, 화물 파업 효과로 일부 라인이 정지된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의 동조 파업이 이어지면 화물 파업 승리에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촛불과 노동자 투쟁이 더 긴밀히 융합돼 자신감을 배가한다면 훨씬 위협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지난 주말 비정규직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수천 명의 행진대열과 이번 주 텀프연대 2만여 명의 파업 대열이 시청 ‘촛불’ 광장을 지척에 두고 애써 청계광장에서 행진을 멈춘 것은 아쉽다.

금속노조·공공연맹 지도부와 주요 노조 활동가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촛불에 밀린 한나라당이 ‘물·전기·가스·의료



촛불 소녀의 동지들인 노동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민영화는 안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이명박이 보인 온갖 꼼수를 볼 때 믿기 힘들다. 공공

부문 민영화를 확실히 철회시키려면 투쟁이 필수적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작 과감하게 투쟁에 나서기를 꺼리는 지도자들은 현장조합원에게 책임 전가하기를 멈춰야 한다.

현장 활동가들의 주동성이 중요하다. 현장 활동가들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작된 파업 물결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을 지지하면서, 노동조합 대의기구와 현장에서의 선동·조직 화를 통해 파업이 앞당겨지고 하루 파업에서 더 나아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많은 현대차 조합원들이 파업을 지지합니다

정동석(현대차 울산공장 전 대의원)

제가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노동자 4만 4천 명 중에, 이번에 투표한 사람은 3만 8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투표자 중에서 2만 1천6백18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이 파업에 관심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파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짧은 기간 동안 치러진 선거치고는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물론, 지도부가 더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조직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제가 21년 근무했는데 6~7년 전부터 1주일에 한두 번씩 특식으로 보쌈, 고깃국 이 납니다. 그러나 한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수입 쇠고기입니다.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현대차 노동자들도 전기세, 도시가스, 교통비 올라갑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똑같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일하는 한 동료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족 식생활 문제도 대거 참가해서 전체 규모가 7천~8천 명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현장에서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몇몇 개인이 그럴 뿐입니다. 그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는 홍보물은 있어도 반대 입장은 회사가 만든 것 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한 조합원은 “찬반투표 할 필요도 없이 파업해야 한다. 수십만 명이 촛불집회 하고, 1백만 명이 모이는데,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주 사이에 ‘현장조직’ 6개가 이번 파업 가결을 위해 공동 선전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식당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서명을 받고 <맛불> 호위를 배포하고 버튼을 팔았는데, 하루에 만 조합원 4백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또 6월 10일 울산에서도 조합원 3천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대거 참가해서 전체 규모가 7천~8천 명이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번 파업에 반대한다는 말도 근거 없는 애입니다.

노동자와 주민 모두를 위한 이번 파업을 집행부가 제대로 조직해야 합니다.

오늘날 파시즘이 권력을 잡을 수도 있을까?

오늘날 파시즘이 가하는 위협은 얼마나 심각한가? 많은 사람들은 — 심지어 좌파들조차 — ‘독재자들의 시대’였던 20세기 전반부이나 파시즘이 있었던 것으로 여긴다. 신자유주의·세계화·인터넷의 시대에 웬 파시즘이냐는 것이다.

물론 파시즘은 자본주의가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를 겪던 시기의 산물이다. 대공황이 독일 사회에 가한 충격은 급기야 1933년 1월 아돌프 히틀러가 지도하는 나찌가 권력을 잡는 데까지 이른다.

그러나 1930년대의 경제 위기는 훨씬 장기간 지속돼 온 사회적 균열이 최고점에 이른 때였을 뿐이다. 우파 역사가 에른스트 놀테는 1914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시기를 ‘유럽 내전’이라고 부른다.

세계대전과 경제 위기의 충격이 결합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에 균열이 생겼다. 이것은 우파와 좌파 사이 첨예한 정치 양극화를 낳았고, 동시에 사회적 긴장을 억제해 온 전통적 정치 구조를 와해시켰다.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전쟁을 치르면서 분노하고 급진화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다. 그들은 극단적 폭력에 익숙해져 있었다.

제1차세계대전의 끝무렵인 1918년에 등장한 초기 파시스트 운동은 그런 사람들 중 일부를 흡수해 준군사 조직을 만들었다. 놀테는 이들의 정치를 ‘혁명적 반동’이라 칭했다. 즉, 파시스트들은 혁명의 위협을 없애려 애쓰면서도 그들만의 ‘혁명’을 약속했다.

파시스트 운동이 얻고자 한 것은 ‘민족’ 자본이 노동과 화합하고 소규모 생산자들이 우위를 차지하는 사회였다. 이것은 몽상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이데올로

기는 유럽 내전이 부른 사회적 불만의 초점을 외부자들 — ‘유대계 금융자본’ — 에게 돌리려 했다.

이데올로기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이데올로기는 조직 노동계급을 겨냥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1920년대 초 이탈리아에서, 또 그로부터 10년 뒤 독일에서 대자본과 국가는 마지못해 파시스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오직 무솔리니와 히틀러

지난 4월 이탈리아 총선에서 승리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오른쪽)와 파시스트 정당 국민동맹(NA) 당수 지안프랑코 피니

만이 조직 노동계급을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원자화시킬 단련된 대중운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914~1945년의 조건과 오늘날의 조건을 비교해 보면, 분명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선진국의 자본주의는 지난 30여 년 동안 이따금 거품 호황을 누리며 느릿느릿 성장해 왔다. 그 결과 대중의 생활수준은 — 특히 미국에서 — 정체했지만 세계대전과 대공황 시기 같은 대량 빈곤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오늘날 자본주의 정치 구조는 여러

면에서 당시보다 훨씬 견고하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1919~33)은 강력한 ‘반체제’ 정당들 — 극좌 공산당과 극우 나치 — 이 존재했기 때문에 늘 불안정에 시달렸다. 프랑스의 제3공화국도 강한 압력으로 위기에 시달렸다.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당시와 유사점을 발견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와 치열한 국제 경쟁 때문에 세계경제 구조에 갈수록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자본주의 정치 체제는 외견상 견고해 보이지만 내용물은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 자신을 대변하지 않는 주류 정당들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각자의 삶에만 몰두하게끔 하는 소비지상주의가 결합돼,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은 우려할 만하다. 계속되는 스캔들로 정당 체제가 신용을 잃고 붕괴하자 억만장자 정치 사기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극우 세력들과 손을 잡고 정부를 장악할 수 있었다.

영국국민당(BNP)이나 프랑스의 국민전선(FN) 같은 위험한 나치 정당들은 권력을 잡기엔 여전히 한참 모자라다. 그러나 그들은 대중의 지지를 모으고 단련된 활동가들을 길러 내고 있다. 이들은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치면 자신들이 주요한 세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맞서는 운동을 지금 당장 건설해야 한다. 그 위협이 너무 커지기 전에 말이다.

촛불 항쟁 속의 ‘다함께’

6월 10일 1백만 시위 이후로도 ‘다함께’와 <맞불>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불>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고, 후원금을 내고, 다함께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불>은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4만여 부 판매됐습니다. 특히 6월 10일 전후로 판매된 90호는 무려 1만 2천 부가 판매됐습니다. 판매에 나선 회원 수의 제약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더 판매할 수 있었을 정도입니다.

<맞불>은 대도시의 촛불집회 현장, 서울의 주요 변화가, 대학뿐 아니라 기아차 화성공장과 현대차 울산공장, 화물연대 파업 집회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6호까지 발행된 <맞불> 호외도 전국적으로 28만 부 배포됐습니다. 호외는 받아가려는 손들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회원도 아닌 분들이 우리 호외를 열심히 나눠 주고 있는 모습도 자주 봅니다.

집회 현장에서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다”며 바로 <맞불>을 구입하는 분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다함께에 대한 악선

동 때문에 오해를 하고 회원에게 항의했다가 호외를 읽고 다시 와선 “기사 내용과 내 생각이 똑같다. 아까 화를 내서 정말 미안하다”며 신문을 구입하고 지지금까지 냈습니다.

집회에서 <맞불>을 읽은 한 시민은 “다양한 쟁점들, 솔직한 현장의 목소리, 독자편지 등이 좋았다. 무엇보다 사실 관계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의견과 주장이 함께 실려 있는 점이 마음에 든다”며 정기구독을 신청했습니다.

후원

후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에는 ‘함께’, ‘도움이되길’, ‘화이팅’ 등의 이름으로 훈훈한 정성들이 이어졌고, 어떤 분은 얼마 전 만기가 된 적금 중 일부를 입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주 동안만도 2백60여만 원이 모였습니다.

별도의 모금이 아니더라도 슬그머니가 판매 와서 수표를 건네는 분도 있었고, 무료 배포되는 호외를 돈을 내고 가져가거나 <맞불>을 사고 잔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후원도 이어졌습니



촛불집회 현장에서 <맞불>을 들고 자신감 있게 주장을 펼치는 ‘다함께’ 회원

다. 이렇게 모인 돈도 지금까지 2백만 원이 넘었습니다.

다함께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정부 후원도 받지 않고 회비와 지지금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지지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1천 원이면 55명에게 전달할 호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상관 없으니 앞으로도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전화와 이메일로도 지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함께의 개입이 자발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교 동창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체계와 룰이 있기 마련이다. 자발성을 최대한 반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며 우리를 격려해

주신 분, “홍익대에 서울시장 오세훈이 있는데 한승수 총리 때처럼 다함께 회원들이 참가해 속시원하게 반박 좀 해주면 좋겠다”는 분, “그동안 몰랐던 것들이 이해되고 <맞불>이 주장하는 운동의 방향에 진짜 동의한다”며 정기구독 신청하고 후원금을 보내신 분, 동네 주민들에게 호외를 배포하며 촛불 집회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는 주부 등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느라 손발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다함께와 <맞불> 웹사이트 방문 수도 “이명박 지지율과 월급 빼고 오르는 모든 것”들 중 한 가지가 됐습니다. 5월 14일에서 6월 14일까지 다함께 웹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 수는 작년 하루 평균에 비해 무려 7배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관심과 지지가 회원 가입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월 2일 이후 2백90명이 넘는 분들이 다함께의 새 식구가 됐습니다. 몇몇 신입 회원들의 활약은 눈부십니다. 열정적으로 <맞불>을 판매하고, 호외와 손팻말 배포 등에 적극 나서고, 자신의 대학·지역·직업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촛불시위에 참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함께에 보내 주신 지지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다함께는 비정한 시장 지상주의 정부의 패배를 위해 끝까지 헌신할 것입니다.



전 세계 화물 노동자의 고유가 반대 투쟁

김용욱

고유가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먼저 투쟁에 나선 것은 일부 유럽 나라 어민들이었다. 그들은 벌써 몇 주째 항구를 봉쇄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페인 · 포르투갈 · 네덜란드 · 폴란드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헝가리 등의 유럽 국가와 타이 · 홍콩 · 네팔 등 아시아 국가의 화물 운송 노동자와 영세 트럭 소유자(그 중 상당수가 직접 운전을 한다)들이다.

인도에서는 화물 노동자 4백만 명이 7월 2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의 화물 노동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치열한 투쟁으로 최근 국제적 주목을 받은 곳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다.

포르투갈 화물 운전자들은 파업뿐 아니라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트럭으로 봉쇄하는 대담하고 효과적인 투쟁 전술을 사용했다.

정부와 기업주 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며칠 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세제 특혜 등 많은 요구들을 받아들였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가장 큰 화물 운전자 연맹의 배신 때문에 몇몇 핵심 요구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파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화물 운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정부와 기업주 들의 뇌리에 확실히 각인시켰고, 앞으로 정부와 기업주 들이 전향적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시장주의

전 세계 화물 운전자들이 고유가에 책임 지라고 정부와 사장 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고유가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시행한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먼저, 2003년 이후 유가 상승을 추동하기 시작한 것은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지지한 부시의 이라크 침략 전쟁이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중동 침략에 장단을 맞추면서 석유가 상승에 일조했다.

지난 1년 동안 유가를 두 배 이상 폭등

시킨 1등 공신은 투기 자본의 유입이었다. 각종 투기 자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품 붕괴 이후 석유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고 있다.

또, 각종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 시장주의 정책은 화물 운전자와 다른 노동자 · 서민 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오늘날 많은 정부들이 높은 유류세를 부과한다. 이 세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부족 부분을 부유층에게서 걷으면 화물 운전자와 대중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정부들은 그러길 거부하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려면 대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주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일부 정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민영화했고, 그에 따라 통행료가 급등했다. 생계를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화물 운전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유가 상승, 높은 유류세, 각종 비용의 상승에도 기업주 들은 운송료 인상을 거부했고 정부는 친기업적 입장에서 이것을 방조했다.

화물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생계를 보장해야 하고 푼돈에 화물을 맡기는 기업주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석유 기업들과 원자재 선물(先物) 투기꾼 등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 고착돼 있고 민간 기업의 이윤 창출을 금과옥조로 삼는 정부들이 필요한 조치들을 자발적으로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물류를 마비시킬 힘을 가진 화물 운전자들이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자 비로소 정부들은 부랴부랴 이런저런 미봉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6월 14일 G8 재무장관 회의에서 투기자본 규제 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도 부분적으로 화물 노동자 투쟁의 압력 때문일 것이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화물 노동자 투쟁은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이야말로 정부와 기업주 들로부터 양보를 얻을 수 있는 단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 - “차라리 죽여라”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등 중장비 건설 기계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은 운반비를 어음으로 받기 일쑤고, 카드깡으로 당장에 필요한 생계비를 충당하다 보면 어느새 신용불량자가 돼 있다. 고유가 때문에 10시간 꼬박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2~3만 원이다. 이들에게 마이너스 통장과 가정파탄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그래서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소속 덤프 · 레미콘 · 굴삭기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과 건설사의 유류비 전액 부담 등을 포함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이행과 운반단가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16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나서 건설 현장의 90퍼센트를 마비시켰다.

이 날 파업에 나선 2만5천 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매우 자신감 넘쳤다.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준 것은 40여 일 넘게 커져 온 촛불시위였다.

그 점에서 6월 16일 대학로에서 청계광장으로 행진한 2만 5천 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1시간 뒤 시청 앞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촛불 운동과 화물연대 파업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건설노조의

요구가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정부의 말만 믿고 뒤통수를 맞은 것이 어디 하루 이틀 애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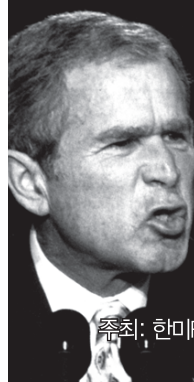
따라서 건설노조 지도부가 1박2일 상경투쟁 뒤 산개해 힘을 분산시키는 전술을 택한 것은 아쉽다.

이명박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려는 안 된다. 차량을 동원한 집중 상경 투쟁 등으로 확실히 밀어붙여 분명한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최미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한국에 온다

부시!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부시 방한
항의 집회

일시: 7월 5일(토)
시간 · 장소: 추후 공지
주최: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남민과 이주노동자의 아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권력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당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동자와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통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여러분의 편지를 환영합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된 촛불집회의 생생한 경험이나 이 운동의 발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맛불>에 보내 주세요. 개인적으로 느낀 것

등에 맞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적인 언론입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맛불>에 직접 실어 의견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생한 이

6·10 대행진 참가를 조직한 경험

저는 한국노총 소속 세종호 텔노조의 위원장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권과 '정책연대'를 한답시고 전 국민이 함께 하는 촛불 운동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집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오던 저와 집행부 동료들은 6·10 1백만 촛불대행진에는 노동조합이 공식적으로 참가하지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노조계시판과 각 부서 계시

판에 6·10 홍보 포스터를 잘 보이도록 부착했고 각 부서를 돌며 홍보 유인물로 배포하고, 짧은 홍보 연설도 했습니다. 또, 참가 가능한 조합원 단을 파악해 일일이 설득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조합원 다수는 자신도 참가하고 싶었다며 선뜻 동의했습니다. 미처 통화를 못했던 조합원들도 회사 내 포스터를 보고 당일 집회에 와 노조 깃발로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전 조합원의 10퍼센트가 넘는 30여 명이 노조 깃발을 들고 참가해 종로 대로를 행진했습니다. 참가 이유는 다양했지만, 참가한 조합원들 모두 오기를 정말 잘했다며 신나고 뿌듯해 했습니다. 집회 후 입소문이 돌아서 '다음에는 자신도 갈테니 꼭 데려가라'고 말하는 조합원이(심지어, 비조합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세를 몰아 다음 집중 집

비민주적 협성대 총학생회에 대한 불만과 저항

저는 5월 14일 촛불시위 이후 '다함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6·10 시위 홍보 포스터 40장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입해 학내에 붙였습니다. 그러나 총학생회로부터 포스터 철수를 요구받고 먹살까지 잡혔습니다. 학교에는 검열제도인 게시물 허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생회 측이 촛불시위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시규정까지 만들어 포스터를 수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공의 문제

저는 다함께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시위 참가 호소와 학생회 비판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학내에 배포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유인물로 돌리고 서명도 받으며 주로 시위 참가 호소 홍보전을 진행했

이계원

전·의경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이명박은 전투경찰과 의무경찰(통칭 전·의경)을 동원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맞서고 있다. 그래서 군대 갔다가 재수 없이 차출되거나, 신호등 정리나 하는 줄 알고 지원한 의경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의경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환멸감이 생기는 것 같다. 한 전경은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전경 일을 하고 싶지 않다며 육군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신청했고 휴가를 나온 전경들 중 일부는 시위대의 요구에 공감하고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한 시민은 "나도 의경 출신이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팻말을 들기도 했다. 전경 제도는 '대간첩작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국민의 건강권과 생활·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국민들이 '간첩'인가? 그래서 나는 노무현 정부가 2012년 폐지하기로 약속한 전·의경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의경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말이다!

김재원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대도 얼마든지 물어 봐 주세요.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흠어진 개인이라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는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주간 <맛불>을 발간하고,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또한 거리와 대학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명박에 맞선 저항이 승리하기 위해선 토론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셔서 여러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해 보세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길에 함께합시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395(예금주: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www.alltogether.or.kr

'다함께'는 1995년 프랑스 공공부문 총파업과 2000년 프랑스 니스에서 있었던 국제 반자본주의 시위에서 가장 인기 있는 گروه였던 '투쟁상발'(Tous Ensemble)에서 따온 이름으로, 다양한 운동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면 관계상 실리지 않은 독자편지나 소식/보고는 온라인에 실립니다. 6월 23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주세요

지난 호 독자편지에 대한 의견

핵심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맛불> 91호 구태욱 씨의 독자편지(<맛불> 90호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에 대한 반박글)를 읽고 촛불시위가 가두 행진으로 발전하는 데 참을성 있고 단호한 태도로 기여한 '다함께' 회원으로서 매우 불쾌했다.

먼저, 마이크를 뺏으면서 민주적 토론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대체회의가 행진'을 막는다고 오해한 것뿐'이라는 '추측'은 행진에 적극 참가한 사람으로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마치 이들이 '이명박 탄핵'을 외치며 투지를 불태웠던 사람들의 대표라도 되는 양 진술한 것도 황당하다.

시위 대열이 급격히 줄어들어 물리적으로 경찰 봉쇄선을 돌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맞서 싸우겠다는 신념이 부족한가. 핵심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어떤 방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신념이 부족한가. 핵심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토론했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오해라



'다함께'는 촛불시위가 가두시위로 발전하는 데 참을성 있고 단호한 태도로 기여했다

돈 1백~2백 명의 사람들에게 비해 이명박에 맞서 싸우겠다는 신념이 부족한가.

핵심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어떤 방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신념이 부족한가. 핵심은 민주주의의 문제였다.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토론했조차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오해라

김태현

글의 논지를 오해해선 안 돼

'아름다운인생' 남은 <맛불> 91호 편지('굳이 '인터넷' 페인'이라고 말해야 했다')에서 네티즌들이 기업들의 조중동 광고 게재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이거나 화물연대의 미친 소 운송 저지 선언을 지지한 사실을 들어 '페인'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라는 글의 논지를 오해한 것이다.

90호의 그 글에서 최일봉 동지는 "온라인 필명 '안단테'가 이명박 탄핵 운동을 발의한 것"이나, "일부 네티즌 그룹들이 ... 능동적으로 주요 조직자 구실을 자임"한 것처럼 온라인 공간이 운동에 기여한 사례를 공정하게 평가했다. '아름다운인생' 남의 글에서 지적했던 '페인'의 정확한 구절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김대중이나

김준호

폭력과 비폭력, 중요한 것은 단결

<맛불> 91호의 '체제의 폭력에 맞서는 효과적 방법'은 매우 인상 깊은 기사였다. 24일 첫 거리행진 때는 '청와대로 진격'할 것을 주장하던 이들이 10일 1백만 촛불대행진에서는 '비폭력'을 외치기 시작했다. 겉으로만 보면 경찰 폭력과 우파들의 공격에 주춤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스크립을 짜고 시위대의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는 예비 군들, 경찰 차량을 끌어내는 사람들, 이들에게 환호하는 시민들 — '절대적 비폭력주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무기 중 '물리적 폭력'이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시위대는 경험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폭력'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시위에 참가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했다. '비폭력' 구호는 우리의 전투력을 감소시키는커녕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 다만 우려할 점은 '비폭력' 구호로 인해 '의회주의'적 대안이나 '온건 노선'으로 운동의 일부가 돌아서는 것이다. 이명박 하수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다. '비폭력'을 외치는 것은 '물리적 폭력'이 우리에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지 '적당히 하자'는 '온건노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박용석

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분이시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게인 1987 — 촛불 운동은 어디로? 연사 김어진(다함께 활동가) 6/26 (목) 오후 6시 30분 | 중앙대 문과대 2506호 문의 011-9937-1755 | 참가비 2천 원

언론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하는가? 연사 서범진(맛불) 공동편집자 6/26 (목) 오후 6시 30분 | 중앙대 문과대 2506호 문의 011-9875-4790 | 참가비 1천 원

사회단체의 활동은 시민의 자발성을 훼손하는가? 연사 최일봉(다함께 운영위원) 6/26 (목) 오후 6시 | 고려대(추후 공지) 문의 016-546-5560 | 참가비 없음

추가된 포럼은 다함께 웹사이트(www.alltogether.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 안내 및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으로 연락주세요.

일부 포럼은 홍보 및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참가비를 받습니다.

사회주의가 대안이고 가능할까요?

얼마 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다가 '다함께'를 알게 됐습니다. 자본주의의 폐단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글들도 좋았구요,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생각해서 가입도 했어요.

그런데 다함께 '기본 입장'을 보면 자본주의의 폐지를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임 같은데 저는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지만, 자본주의 자체를 없애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주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사실 지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진짜 사회주의가 아니잖아) 사회주의가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체제인지도 모르겠고요.

다함께는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를 꿈꾸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걸 실현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 ... 한마디로 '고민' 상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회원으로 참여하기엔 무리가 있는 건가요?

FLY



소식/보고

청소년들의 수업 거부와 학내 시위

지난 6월 16일 광주 송원 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치마 길이 제한 등 복장 단속과 두발 제한, 반강제적 야간자율 학습, 상습적인 체벌 등에 분노한 학생들 8백20여명이 세 시간 동안 수업을 거부했다. 3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채 운동장으로 뛰쳐나왔고, 1·2학년 학생들도 함께 수업을 거부했다. 1년 전 교장과 생활지도 교사가 새로

부임하면서 일방적으로 교칙을 변경해 학생들을 억누른 것이 학내 시위의 원인이 됐다. 12~13일 수련회에서 일부 학생들이 술을 반입하다 걸려 체벌을 당했다. 학생들은 학생지도 교사에게 "엎드려뵈"를 하고 각목으로 맞았고, "1", "일벌로 세워 놓고 뺨"도 맞았다.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도 폭로됐다.

10일 울산 남부중학교에서도 두발 자유, 체벌 금지, 벌점제 폐지, 교감의 폭행 사과와 교칙 개정에서 학생 참여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학내 시위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울산노동뉴스>의 학내 시위 동영상을 보면 교감이 직접 나와 육성과 위협을 하며 취재를 저지하려 했다. 한 여학생은 인터뷰에서 "여자화장실 문을 못 닫게 고정시켜 놓았다"며 학교 내 심각한 인권 침해를 폭로했다.

체벌·성희롱·인권침해에 시달리는 억압적 교육환경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 친구들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상황이 청소년을 '미친 소'와 '미친 교육'에 반대해 가장 먼저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다.

'미친 교육'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을 지지하고 이명박의 '미친 정책'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

허그루(청소년 다함께 활동가)

주간 <맛불>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웹사이트에서도 정기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02-2271-2395

계좌 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8(예금주: 백은진)



화물연대 파업에 승리를!

김어진

화물 노동자들의 반란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부산항·인천항·마산항·군산항의 물류는 거의 마비됐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허겁지겁 내놓는 실효성 없는 대책은 파업 노동자들의 분노에 기름만 붓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일종인 표준요금제조차 몇 년 후에야 시행하겠다고 한다.

비조합원들의 대대적 참가가 이번 파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전국 운송트럭 32만 대 가운데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7천 대 정도라는 통계가 있다.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은 뜨거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폭주하는 지지 댓글과 시민들이 파업 농성장에 자발적으로 보내는 지원 물품만 봐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가 폭등의 가장 큰 희생자인 화물 노동자들의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있다.

원가 공개조차 하지 않으면서 영업이익 1조 원을 끌어모으고 지난 8년 동안 공장도 가격을 속여 8조 원을 챙긴 정유사들에게 사람들은 적대감을 느끼고 있다. 삼성전자의 로지텍과 현대그룹의 글로벌비스 같은 운송업체들이 화물 노동자들의 돈을 가로채 비자금 창구 노릇을 했다는 사실에도 분노하고 있다.

도로 점거

많은 이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보여 준 커다란 힘에 고무받고 있다. 정유사를 규제하고 국영 에너지 기업을 만들어 기름값을 낮추라는 화물연대의 대안에 공감을 나타내고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도 영감과 자극을 주고 있다. 철도본부의 대체수송 거부로 화물열차의 일부 운행이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물론, 물류가 자본주의의 혈관임을 잘 알고 있는 이명박이 언제까지나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력 투입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이명박의 진두지휘 하에 청와대는 “단호대처”를 운운하며 탄압을 시작했다. 조중동과 우파는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이명박에게 각종 주문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삼성·LG·현대기아·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려면 화물 노동자들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충분히 사용해야 한다.

비조합원들이 항구와 기지 주변의 농성장에 모일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도 필요하다.

파업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항만 봉쇄와 고속도로 점거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상품의 70퍼센트가 유통되는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봉쇄해 통쾌한 승리를 거두곤 했다. 2003년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바로 그렇게 했다. 인천의 한 화물연대 노동자는 “당시에 항만봉쇄와 점거는 정말 대단했다. 사람들에게 ‘한다면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 줬다. 그때 처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광주와 의왕 등 곳곳에서 화물 노동자들이 경찰의 대체수송을 막으려 하자 크고 작은 충돌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화물연대 지도부가 항만 봉쇄나 고속도로 점거를 투쟁 방법으로 분명히,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오히려 애꿎은 노동자들이 경찰 탄압에 희생될 수 있다. 파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좀더 과단성 있는 방법을 써야 한다.

또, 민주노총의 연대파업만큼 더 효과적이고 위력적인 승리 비결이 어디에 있겠는가.

업무복귀명령 — 파업 징계할 때만 노동자로 인정?

이명박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업무복귀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만들어진 악법이다.

화물 노동자들이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운전자격과 운송사업 허가도 취소된다.

화물연대가 그토록 노동자성을 인정해

달라고 수년 동안 요구해도 무시한 정부가 유독 파업 노동자들을 벌주는 데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꼴이다.

위헌 소지가 있는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덜덜 거리는 이명박 불도저를 완전 마비시킬 수 있도록 본때를 보여 줘야 한다.

화물 노동자들의 목소리

‘다함께’는 인천항·부산항·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평택항을 찾아 파업 현장을 취재하고 노동자들을 인터뷰했다. 전문과 생생한 현장 취재는 <맞불> 웹사이트에 실려 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됐어요. 그때 기름값이 9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9만 원대예요. 살림 어떡하구요?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평택 파업 노동자의 아내)

“지난달에 부산에 갔다 오니까 기름값만 65만~7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런데 운임료로 고작 90만 원 정도 받았어. 통행료라도 덜 내려고 새벽에 뜬 눈으로 지새우다가 7~8시간을 꾸벅꾸벅 졸면서 왔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매번 약속은 했어도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 파업하면 뭐하냐며 노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번에 또다시 얼버무리고 끝내면 안 된다.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업무개시 명령은 전쟁 때나 발동하는 거 아닌가? 손해가 커서 차를 세워서 수박에 없는 데, 내 차를 그냥 멈추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인가?”

“2003년 이후 비조합원들이 이렇게 많이 동참하는 파업은 처음이다. 촛불집회처럼 우리도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전쟁터에서 일하다 죽으라고 했던 이명박

한 노동자는 1981년에 이라크 바스라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할 때 당했던 고통을 떠올리며 이명박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냈다. 당시 이라크와 이란은 전쟁중이었는데 한국 노동자들은 공습이 있을 때는 대피소에 숨어 있다가 공습이 끝나면 다시 나와서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명박은 비자를 주지 않겠다고며 출국을 막았다고 한다. “저는 중동에서 정말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실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정말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특별 취재팀 : 김형환, 박수원, 박설, 오정숙)

맞시즈 2008은 40여 개의 토론과 진보적 영화, 음악, 사진전 등이 어우러지는 저항운동의 축제이자 대안을 모색하는 장입니다. 맞시즈 2008에서는 촛불 운동의 주도적 참여자들, 국내외 반전·반신자유주의 활동가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연설할 것입니다. 맞시즈 2008에서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촛불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운동의 방향과 더 나은 사회의 대안을 함께 모색해 봅시다.

주요 연사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농민운동가 박원석 광주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석균 의사/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자문위원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정책자문위원 김지운 고려대 학생/토론회에서 한승수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일명 ‘고대녀’ 강양구 <프레시안> 과학·환경 담당 기자/황우석 사기극을 들춰낸 언론인 김수행 맑스주의 경제학자/사회과학아카데미 대표 김하영 다함께 운영위원 이강택 ‘KBS 스페셜’ PD/광우병 문제를 최초로 공론화한 언론인 이영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부지부장 이희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이슬람>의 저자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계간 <마르크스주의 연구> 편집위원장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강연 연사

조너선 닐 아동문학가/대안세계화운동가 이언 버철 영국의 맑스주의 역사가 버지니아 로디노 미국 반전 단체 ‘평화정의연합’ 국제연대위원회 공동위원장

다
함
께
2008

저·항·운·동·의·축·제

일시_ 8월 14일(목)~17일(일) | 장소_ 고려대학교

주최_ 다함께

참가문의_ 02-2271-2395, atgmail@nate.com, http://www.alltogether.or.kr